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이래서 바꿔야 합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목 차

1. 역사교과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2문12답) 1
2. 한국사 교과서(학생용, 교사용지도서) 서술 편향성 사례 모음 15

1

역사교과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2문12답)

1. 국정은 무엇이고, 검정은 무엇인가요?

- ☞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조)”를 말하며, 검정은 출판사가 저자를 섭외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한 뒤 검정기관에 출원하여 통과한 교과서 중에서 학교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 1974년부터 2010년까지 고등학교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국사 교과서를 사용 (2013학년도까지 **단일한 국정 교과서**로 수능 시험을 치름)하였으며, 2011년부터 **검정화** 되어 다종 교과서 중에 선택·사용하게 됨

2. 고등학교 국사가 검정으로 바뀐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다시 국정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지금까지 정부는 검정제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대강화하여 집필자의 재량권을 상당히 확대하였고, 사실상 인정제에 가까울 정도(9종 출원, 수준미달인 1종만 탈락)로 교과서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였습니다.
- ☞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필자들의 주관적 역사관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현존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몇몇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 ☞ 또한, 자신들과 다른 역사관을 가진 교과서에 대해서는 실력행사를 통해 채택을 철회하게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 ☞ 국정화 논의는 현재의 검정제로 인해 훼손된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문제

한쪽에서는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소위 ‘좌편향’되었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학사 교과서가 오류투성이의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하며 채택거부 투쟁까지 벌여 교학사 교과서가 오류에 대한 수정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채택률 0%(1개 고교 채택)

- ☞ 검정제의 취지가 다양한 시각의 교과서를 발행하여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데, 협박까지 해서 채택 철회를 하게 만든 것은 검정제의 의미를 퇴행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높은 채택률을 보이는 교과서의 ‘대세적 시각’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채택이 되지 않거나 채택거부운동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 ☞ 이렇듯 검정제 본래 취지인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과서들의 채택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여·야 집권 시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존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사례(미래엔 326~327p)

- 여당 집권 시기는 산업화와 경제발전, 반공을 앞세워 독재를 강화하고 민주화를 희생시켰으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점을 부각(반공과 경제성장을 민주화 억압·독재의 도구로 언급)하고, 야당 집권 시기에는 남북관계 진전, 권위주의 탈피, 친일파 청산 등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았으며 소외 계층을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
- 당시 사건과 관련된 자료나 구호, 혹은 외부의 다양한 평가 중 집필자가 선호하는 내용만을 발췌하여 인용하거나, 당시 집권층이 처한 상황이나 인물의 의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을 사실로서 단정 짓는 방식으로 서술

- ☞ 따라서, 이념과 정치세력에 편향적이지 않은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중립적인 시각의 교과서를 발행함으로써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국정화로의 환원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3. 학생들의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정제가 더 좋지 않을까요?

- ☞ 교과서가 8종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역사 교사들이 협의하여 선택한 1종의 교과서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 ☞ 서로 다른 시각의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서로 달리 하게 될 것이고, 좌우 이념대립에서 초래된 분단을 겪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 다른 역사인식의 사례1 : 분단의 책임

- 김구와 김규식, 여운형 등 중도 세력과 김일성이 서로 만나 적극적으로 통일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승만 세력의 단독정부 수립 추진에 의해 통일이 좌절되었다고 인식 가능(미래엔 310p 등 7종 대부분 교과서)
- 이승만과 미군정이 당시 공산주의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한반도 공산화를 막아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식 가능(교학사 305~306p)
⇒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시기에 **이념대립을 확대·재생산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 다른 역사인식의 사례2 : 6.25의 책임

- 이미 38도선 부근에서 교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고, 애치슨 선언과 한국과 미국 간에 상호 방위 원조 협정 체결 등의 사실로 보아, 전쟁을 사전에 예상할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서 침략을 당하였다고 인식 가능(미래엔 316p)
-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북한에게 남한이 기습을 당하게 되었다는 인식 가능(교학사 310~313p)

- ☞ 지금까지 한국사를 수능에서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어 이러한 사실을 유의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우 적었지만, 앞으로 수능 필수화를 앞두고 교과서의 맨 마지막장까지 충실하게 배우게 될 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만들 수 있는 교과서의 서술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남·북한의 토지개혁(미래엔 314p)

- 남한 :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몰수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무상 분배에 따른 부담으로 농민이 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가 증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워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되지 못하고 몰락하였다고 서술
- 북한 :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친일파의 토지를 몰수(북한 개혁의 한계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뒤에 교육부 수정지시에 의해 들어감)
⇒ 남한에 비해 **북한의 토지개혁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게 할 가능성

☞ 이런 서술 기초가 현대사 전체에 일관되게 녹아있다면, 학생들은 남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 북한이 오히려 더 개혁을 잘 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물론, 이러한 서술 가운데 명백한 오류는 없으나, 학생들이 숨어있는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눈에 보이는 역사왜곡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입니다.

※ 친일파 처리 관련 서술 (미래엔, 314p, 315p)

- 남한: 해방 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민족적 과업이었으나 미군정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세력을 비호하였음. 반민특위를 구성하였으나 일본 경찰 출신 노덕술 검거에 대해 이승만이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소속 국회의원 구속, 반민특위 해체됨. 경찰들이 반민특위 습격, 최근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친일 반민족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2004). 친일파 취득 재산 국고 환수 법적 근거 마련(2005).
- 북한: 정부 수립과정에서 임시 인민 위원회가 친일 민족 반역자 및 지주의 5정보 초과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토지 개혁 실시(1946.3)

☞ 남한이 친일파 처단에 소극적이었던 배경은 당시 미군정이 남한의 공산화를 막고자 하였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고, 북한의 경우 대부분 지주였던 친일파 숙청이 공산정권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음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남한의 친일파 숙청이 북한에 비해 미비하였음을 비판하는 것은 현존하는 특정 세력을 친일파 비호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려는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 ☞ 이러한 여러 가지 상반되는 역사적 해석이 상존하고 있는 현대사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는 좌와 우,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만나 합의하여 교과서를 집필하고, 만약 이들이 결코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중도적인 분들로 구성된 집필진이 객관적인 사실로 교과서를 쓰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합니다.

4. 국정화는 유신으로 회귀하여 정권을 미화하는 어용 교과서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요?

- ☞ 과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만드는 국정 교과서도 똑같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식상한 방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 현대는 과거와는 비할 수 없는 정보화 시대이므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정권을 의도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을 실었을 경우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실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시대에 국가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편집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내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견제 장치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정 교과서는 오히려 최고의 중립성을 가지기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 국정화되면 더욱 내용이 많고 재미없고 질이 떨어지는 교과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 ☞ 국정 교과서는 출판사 간에 경쟁이 없으므로 학교의 채택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달거나 자료를 인용하는 부분 등은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출판사의 투자비용에 따라 질적 차이가 크게 나는 교과서가 나올 우려는 오히려 더 적어질 것입니다.

- ☞ 현재는 출판사가 선정한 집필진(교수, 교사)이 출판사가 임의로 주는 계약금을 받고 편의대로 단원을 나누고 본업에 종사하면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틈틈이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는 모두 일정이 바빠 저자 전체 회의가 이루어지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듯 오직 출판사의 투자비용(계약금, 참고자료 구입비, 디자인 비용, 검토비 등)에 따라 교과서의 질이 좌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출판사별 교과서 질의 격차를 해소하기가 어렵고, 수준이하의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교학사 교과서가 오류가 많고 질이 낮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는 짧은 집필기간과 저비용투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교과서 편집의 질은 투자비용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오류 수정 역시 우수한 검토 인력을 별도의 비용으로 확보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투자와 관리 인력을 국가가 상시적으로 갖추고 세밀한 검증을 통해 책임있게 교과서를 개발한다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질이 확보된 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교과서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시대별로 최고의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모델 단위 웹 전시를 통해 검증 받은 후 하나의 체제를 선택하여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2중, 3중의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6.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검정제나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과거의 국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나요?

- ☞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이 분단 상태에 있으면서 이런 종류의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 ☞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논쟁의 양상도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과 검정을 주장하는 양측에서는 특정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 우편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생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이기에, 더 이상 역사교육을 빌미로 학생과 학부모를 정쟁에 끌어들여 역사 교과서에 대한 불신마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서는 안됩니다.
- ☞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 시각과 역사서술 방법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독립적인 시각의 교과서를 책임지고 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근현대사의 비중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왜 줄이려고 하는 건가요? 혹시 현대사에서 있었던 지도자들의 잘못들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요?

- ☞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는 150년 정도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50%의 비중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를 고려한다면 대단히 확대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자세하여 학습부담(해당 년도의 월별로 사건을 암기)도 매우 심각합니다.
- ☞ 근현대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중 다른 선진국의 역사 서술 체계를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역사 서술의 체제는 서술하고자 하는 역사 그 자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역사 서술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올바른 역사 서술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위 제국주의 시대의 가해자의 위치에 있던 국가들과 똑같은 시각과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식민사관의 잔재와 중국 또는 서구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 ☞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은 근대 시기에 비약적인 팽창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민족의 전제정권과 지주 세력을 타도하고 중국 본토를 차지한 공산정권이 현재 중국 정부이기에 공산정권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는 근현대사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의 근현대사는 **외세에 의한 침략과 식민지화로** 이어지는데 이 시기를 지나치게 확대·서술하다보니, 식민지 근대화론, 이념투쟁과 갈등의 부각, 분단 책임론 등 해석이 갈리는 사건들에 대해 **한쪽의 시각이 부각될 위험성이** 생겨났고, 한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반일 또는 반미감정 고조, 남북 간 갈등을 고조시킬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 **전근대사 축소 및 근현대사 비중 확대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사례**

- 이순신의 승리는 세계사에 길이 남을만한 자랑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임진왜란의 발발부터 그 영향까지 2쪽**에 걸쳐 서술되어 있는 것이 전부
- 일제의 식민지 통치 정책 **10쪽**, 일제시대 대중문화의 유행 등 사회문화의 변화 **8쪽**, 해방이후 산업화의 문제점 **3쪽** 정도를 할애

☞ 역사 교육에서 우리 역사를 반성하고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역사의 자긍심을 길러주는 것도 그 만큼 필요합니다. 최근 “명량열풍”은 우리 국민들이 그 만큼 빛나는 역사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역사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역사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는 시간의 길이를 고려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시대별 분량 배분이 있어야 하고, 역사의 서술 체제는 이러한 우리 역사의 본모습을 기준에 놓고 학생들이 이해하고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서술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8. 국정화되면 더욱 암기사항과 분량이 늘어나고 학습부담이 높아지지 않나요?

☞ 검정 전환 직전 국정시기(2005~2013학년도 수능)에는 국사시험이 전체 필수가 아니고, 서울대만이 필수과목이었기에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의 수능은 2017 수능 안내 자료의 예시문항 수준에서 출제할 것이며,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한국사가 수능 필수화가 되었고 2017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학생이 한국사 수능 시험에 응시합니다. 서로 다른 교과서

로 공부한 학생들이 하나의 동일한 시험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 ☞ 이러한 상황 속에서 8종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만 출제하겠다고 아무리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한다고 해도, 교과서별로 전혀 유·불리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은 가장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수능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채택률 1위의 교과서를 앞으로 더욱 선호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빠진 내용이 없는 교과서가 수험서로서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역사과목에서는 분량이 가장 많은 교과서가 채택률도 높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량 증가의 문제는 여러 출판사가 수험서로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검정 체제 하에서 더욱 심각해진 측면이 있으며, 검정 체제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어렵습니다.
- ☞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8종 공통요소를 뽑아낸 참고서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습 부담이 적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사 교과서의 분량과 학습부담 문제는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학생의 학습 부담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 우리 역사의 전개과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올바른 역사이야기 하고, 집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의도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역사서술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 특히 집필자 본인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의 연구성과가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될 여지가 있는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분량의 배분과 사건의 배열순서, 관련 사례나 평가의 선정 및 인용도 집필자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과서는 이러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건 또는 사실의 배열, 분량, 자료 인용 편찬 사례

- 대한제국의 서술 위치: 대한제국→독립협회(비상), 독립협회 창립 → 대한제국 수립 → 독립협회의 개혁(천재)
- 세도정치와 19세기 농민봉기의 분량 : 4p에 걸쳐 별도로 서술(비상교육), 두 주제를 합쳐서 1/2p 정도로 짧게 서술(두산동아)
- 흥경래의 격문 자료 : 원문을 다루고 있는 경우 8종 중 3종에 불과(천재, 비상, 미래엔)

※ 사건 또는 사실에 대한 평가 인용 편찬 사례

- 베트남 파병에 대해
 - 파병은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고 야당을 비롯한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미래엔)
 - 그 외 7종: 외부로부터 받은 평가에 대한 인용 없음
- 이명박 정부에 대해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약속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방송과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미래엔)
 - 그 외 7종: 외부로부터 받은 평가에 대한 인용 없음

☞ 교과서 서술에서 집필자의 재량권 보장은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나 이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 서양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자국사, 특히 해방이후 역사에 대한 시각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식민사관과 서구 또는 중국중심주의 사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이 마련된다면,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편향된 역사 교과서가 나올 위험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0. 국정화할 경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십니까?

☞ 웹전시 등을 통해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찾아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특정 교원 단체 소속 일부 선생님들이나 몇몇 학회 중심의 전문가 분들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과 검정이 폐쇄적으로 결정되던 관행을 깨고, 종래에 발언권을 부여받지 못했던 분들로부터도 폭넓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11. 2007 교육과정과 2009 교육과정이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되고 검정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지금 쓰이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 2007과 2009 교육과정이나 집필기준은 중립적이었고, 그 서술 방식에서 서술 내용을 일일이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대강화의 원칙’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정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집필자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 ☞ 그런데 그 결과, 집필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 또는 역사관, 심지어 정치적 성향까지 교과서에 반영하여 교과서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재의 국정제 전환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하게 간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12. 국영수는 여러 종의 교과서가 출간되어도 수능에서 학습부담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왜 유독 한국사만 수능 필수화가 되었다고 해서 1종의 교과서를 만들어야 학습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 종이 나와도 그 중에 공통요소만 뽑아서 출제한다면 오히려 학습요소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 ☞ 국영수는 도구교과입니다. 도구교과란 그 언어를 배우면 그 언어로 된 어떤 글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원리를 배우면 그 원리를 응용한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과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해당 어휘와 문법 수준의 독해는 비록 교과서와 다른 내용이라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칼 쓰는 법을 배우면 무든 소고기든 모두 자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 하지만 역사는 내용지식 위주의 교과이며, 내용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역사 시험문제입니다. 즉,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맞추어 교과서를 서술한다고 해도 출판사별로 10%정도의 내용편차는 감수해야 할 것이고, 교사와 학생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만약 이런 부분이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학생들은 8종 공통 요소 외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게 될 것인데, 어차피 8종 공통 요소만 뽑아서 공부할 것이라면, 굳이 ‘다양한’ 교과서가 왜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 ☞ 대부분의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면서 서술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과서가 나와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역사관’ 또는 ‘정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한국사 교과서(학생용, 교사용지도서)
서술 편향성 사례 모음

학생용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편향성 사례

I 편향 서술 사례 1

◆ 항일운동·건국 등에서 독립운동가보다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세력에 초점을 둔 서술 (2011 두산동아)

- 민족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술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 운동을 비중 있게 서술함**으로써, 김일성이나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한 단체들의 독립 운동이 더 부각되어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주체세력에 대해 잘못 인식할** 소지가 있음

<두산동아>

- ▲ 조선광복회는 국내의 민족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함경도 일대에도 조직을 확대하고, 보천보 전투 등 국내 진공작전을 여러 차례 단행하였다.
- ▲ 보천보 전투는 당시 국내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이 작전을 성공시킨 김일성의 이름도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역사의 창 1 보천보를 습격하다

1937년 6월 동북 항일 연군 내의 한인 부대원들은 백두산 지구 유격구를 건설하고 '조국 광복회' 조직을 국내에 넓히기 위하여 압록강을 건너 함경남도 보천보 지역을 습격하였다. 이들은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 소방서 등 일제의 행정 관청을 공격하였으며, 철수하던 중에도 추격하던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은 당시 국내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고, 이 작전을 성공시킨 김일성의 이름도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에 늘란 일제는 조국 광복회의 국내 조직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만주 지역 유격대에 대한 공세도 크게 강화하였다.



○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동아일보

I 편향 서술 사례 2

◆ 정부 수립 과정에서의 '선거'에 대한 서술(2014 두산동아)

-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한은 '남한만의 선거'로, 북한은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전체 선거'를 통해 제헌내각을 만들었다고 서술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남북한 전체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립됨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게 서술되어 있음

<두산동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제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정부 수립을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공산당은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고,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 참가 세력과 일부 중도계 인사들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참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북한, 정부를 수립하다

1946년 2월에 북한에서는 소련의 후원 하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정부 구성을 하여 '무상 몰수·무상 분배'의 '토지 개혁'을 단행하고, 산업을 국유화하였으며 친일파를 처벌하였다.

북한에서는 1947년 12월 임시 헌법 초안을 만들고, 1948년 2월에는 조선 인민군을 창설하였다. 임시 헌법 초안을 인민 토의에 부치는 등 정권 수립을 진행하던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 인민 회의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 인민 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를 승인하였다.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수립 경축 대회(1946. 2)

■ **북한의 토지 개혁** 북한의 토지 개혁의 경우,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으며, 1958년에는 집단 농정화가 이루어졌다.

■ **남한에서의 최고 인민 회의**의 대의원 선거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

▶ 편향 서술 사례 3

◆ 6·25 전쟁 중 민간인의 희생(2014 현행 미래엔, 두산동아)

- 전쟁 중 민간인에 의한 학살 부분의 서술에 있어 북한군에 의한 학살보다 **미군·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강조**하여 서술

〈미래엔〉

- ▲ 북한군은 함남 함흥과 전남 영광 등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미군과 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도 일어났는데, 미군에 의한 노근리학살 사건과 국군에 의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2년,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민간인 희생에 사죄하는 군인상(경남 거창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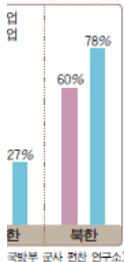
전쟁 중 공권력에 의해 여러 곳에서 민간인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북한군은 함남 함흥과 전남 영광 등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미군과 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도 일어났는데, 미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 사건(충북 영동)과 국군에 의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2년 부산 고등 법원 재판부는 거창 사건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사건으로 '피고(국가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피고는 유족 박씨에게 피해 배상금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다. 반면, 북한 정권은 전쟁 중 저지른 민간인 살상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두산동아〉

- ▲ 북한군은 지주와 자본가, 군인 및 경찰 가족들을 처형하고, 퇴각하면서 수많은 지식인과 정치인 등을 끌고 갔다. 국군과 경찰은 좌익 출신의 보도연맹 소속원, 교도소 수감자 등을 처형하였다. 충북 영동의 노근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많은 피난민들이 미군의 총격 또는 폭격에 죽거나 다쳤다.

남북한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다

피해 (단위: 파괴율)



전쟁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엄청났다.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150여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와 300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겼다. 전쟁 중에 양측 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다. 북한군은 지주와 자본가, 군인 및 경찰 가족들을 처형하고, 퇴각하면서 수많은 지식인, 정치인 등을 끌고 갔다. 국군과 경찰은 좌익 출신의 보도연맹 소속원, 교도소 수감자 등을 처형하였다. 충북 영동의 노근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미군의 총격 또는 폭격에 죽거나 다쳤다. 전선이 변할 때마다 상대방에 협조하였던 사람들을 처형하는 보복도 전개되었다.

Ⅰ 편향 서술 사례 4

◆ 박정희를 김일성보다 더 비방(2014 헌법 미래엔)

-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대한 설명과 김일성의 독재체제에 대한 설명을 동일시하여 김일성이 박정희보다 더 합헌적인 것으로 묘사

〈미래엔〉

- ▲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였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 제한을 없앴다. 또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법관 인사권, 국회 해산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였다. 결국 박정희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99.92%라는 놀라운 득표율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유신 체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 체제였다.

- ▲ 남한에서 유신체제가 성립될 무렵,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어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다(1972). 새 헌법에 따라 국가 주석제가 신설되고, 주체사상의 통치이념으로 공식화 되었다.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수립되다

김일성은 6·25 전쟁 이후 독재 권력을 구축하였다. 1960년대에는 중·소 분쟁을 계기로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독자적 자주 노선을 추구하는 한편,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고 생가를 성역화하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남한에서 유신 체제가 성립될 무렵,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어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다(1972). 새 헌법에 따라 국가 주석제가 신설되고, 주체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

교사용 지도서의 한국사 서술 편향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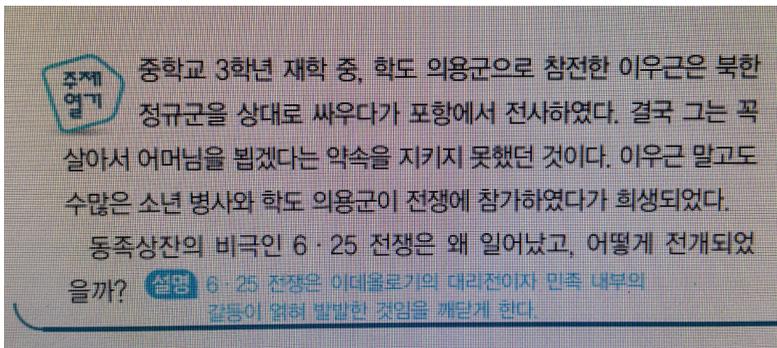
Ⅰ 편향 서술 사례 1

◆ 6·25 전쟁의 책임 관련 서술(미래엔)

- 6·25 전쟁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이라고 서술함으로써,
- 학생들이 6·25 전쟁에서의 책임을 북한의 남침에 의한 것이기 보다, 불가피한 대내외적 사정에 기인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미래엔〉

- ▲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Ⅰ 편향 서술 사례 2

◆ 미군정 관련 서술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지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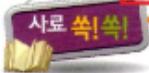
- ‘미군포고령 제2호’에 나오는 “연합군에 대해 고의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는 자 등은 군 회의 결정에 따라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하였다”는 내용을 “광복 이후, **미군정 당시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용서 없이 사형이나 그 밖의 형벌에 처하였다.**”고 서술함으로써,
 - 학생들에게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지학사>

- ▲ 포고 제1호에는 미군이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의 지위로 한반도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어진 포고 제2호에서는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용서 없이 사형이나 그 밖의 형벌에 처한다고 하였다.

○ 38도선에서 만나 약속을 나누는 미군과 소련군 한반도의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주둔

포고 제1호에는 미군이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의 지위로 한반도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어진 포고 제2호에서는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용서 없이 사형이나 그 밖의 형벌에 처한다고 하였다.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부의 포고 제1호(1945. 9.)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관인 나는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일본국 정부가 연합국에 대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던 무력 충돌은 끝나게 되었다. 일왕의 명령과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 문서의 내용에 따라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빛나는 군대는 금일 복위 38도 이남의 한반도를 점령한다. 한국인이 오랫동안 노예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과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독립시킬 것이라는 연합국의 결정을 명실하며, 한국인은 점령의 목적이 항복 문서의 규정들을 이행하고, 한국인의 인건적·종교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관인 본관은 이에 복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하여 군사적인 관리(군정)를 실시하고자 한다.

▶ 편향 서술 사례 3

◆ 북한 주체사상'의 미화(금성 교과서)

- 북한의 주체사상에 관한 서술에서,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독재를 유지하는 사상적 뒷받침이 되었다는 서술 없이, 주체사상탑에 대한 설명으로 “주체사상을 기려 세계 80여 개국에서 글을 새겨 보내왔다는 대리석과 옥돌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고 서술함으로써,
 - 학생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음

주체사상탑 | 교과서 407쪽

평양 동대원 구역 대동강 기슭에 있는 탑으로, 1982년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맞아 주체사상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탑의 전체 높이는 봉화 높이 20 m를 합쳐 170 m이고, 탑신은 70단으로 2만 5,500개의 화강암을 이용해 쌓았는데, 이는 김일성의 70회 생일과 70년의 날짜수를 나타낸다. 기단의 정면에는 ‘누리에 빛나라 주체사상이여’라고 적힌 시비가 있고, 그 앞에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형상화한 높이 30 m의 3인 군상이 세워져 있다. 또한, 탑의 좌우로 대동강 안에 150 m 높이까지 물을 뿜어 올리는 대형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탑 내부에 마련된 전실에는 주체사상을 기려 세계 80여 개국에서 글을 새겨 보내왔다는 대리석과 옥돌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탑 안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능라도 경기장과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등 평양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활용 TIP 북한의 평양 시내 전경 사진을 활용하여 주요 건축물들을 설명한다.

